

거리두기 해제되니 대면범죄 급증

스토킹 범죄 3배, 데이트 폭력·협박 112신고 2배 가까이 증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 6.7% ↓...집에 머무는 시간 줄어든 탓?

최근 광주남부경찰에 60대 남성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50대 중반 여성인 고소인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61)씨를 만나 교제해 오다 6월 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B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피해자의 집과 회사 앞으로 찾아와 수십통씩 전화를 걸었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B씨의 협박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고, 난폭운전을 하며 위협하거나 얼굴에 짐을 뺏으며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광주남부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B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범죄 정황 조사에 나섰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자 오히려 스토킹 범죄 등 '대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최근 5년간 상반기 112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대면 범죄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2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5만 7197건으로, 지난해 28만 77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반면 범죄 신고는 4만 8836건으로, 지난해 4만 3762건에 비해 11.6% 증가했다. 대면 범죄인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난해 84건에서 올해 28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지난해 465건에서 올해 904건으로, 협박 범죄는 지난해 49건에서 올해 99건으로 모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학교 폭력은 2021년 41건에서 2022년 76건

으로 85.4% 늘었으며, 가정 폭력은 2021년 2333건→2022년 2620건으로 12.3% 뛰었다. 피싱 사기도 지난해 4550건에 비해 46.4% 증가한 6661건을 기록했으며, 도박 범죄도 지난해 1057건에서 올해 1243건으로 17.6% 증가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327건이었으나, 올해는 305건에 불과해 6.7% 줄어들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면할 시간이 줄어들어 아동학대 범죄 또한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경찰은 하절기인 7-9월은 연중 112신고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활동도 증가하면서 범죄 신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올 하반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사회적약자 대상 및 재범 우려가 높은 사건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입 진로진학박람회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17일 열린 '2023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 진로진학박람회'에서 고등학생들이 입학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비리' 2년전까지 수사 확대

대포폰 확보 2020년 2학기 수사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참고인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폰'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A씨로부터 지난 13일 대포폰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참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 대포폰을 제출하면서 "2020년 2학기 교원 채용을 앞두고 2020년 5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 B씨가 '흔적이 남기면 안 된다'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선을 요구했고, 이 전화를 이용해 학과장 남편 C씨와 제 남편이 임

용 관련 통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학과장 남편 C씨의 연락을 받고 제 남편이 전남대 후문 커피숍에서 만나 '발전기금 3억-5억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며 "어렵다고 답하자 교원 채용 공고가 곧이어 내려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A씨 주장처럼 2020년 2학기 조선대 무용과 채용 공고는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초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2022학년도 1학기 조선대 강의전담 교원' 선발 과정 뿐 아니라 이에 앞선 2020년 2학기 무용과 채용 절차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이 채용비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용과 학과장 남편 C씨를 입건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학과장 등 2명을 채용비리 혐의로 입건했는데 남은 한 명의 입건자를 놓고 조선대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광주청 반부패수사대는 조선대 무용과 교원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21일 조선대 총장과 교무처장, 무용과 학과장 등 모두 3명을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하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검찰 공무원까지 '이자놀이'

50대 검찰공무원, 월 5%로 1억7000만원 부당 이득 광주 20대, 43만원 빌려주고 이자만 2650만원 챙겨

법정 이자율(연 24%)을 웃도는 살인적 고리(高利)를 받아 챙긴 이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리대부로 적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의 이자를 챙긴 이들 중엔 검찰공무원도 포함됐으며, 무려 10만%대의 이자를 챙긴 이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판사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A(59)씨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8일 광주 모처에서 B씨에게 5000만원을 3년간 빌려주면서 매월 5%(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법정 최고 이자인 월 94만원보다 151만원만큼 초과한 월 250만원을 받아채기는 등 2017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씨 등 2명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1억6899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지급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지급받은 돈을 모두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

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9년 5월 1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씨에게 20만원을 빌려주며 14일까지 3일간 원리금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C씨는 이어 같은 해 5월 13일 추가로 8만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달 15일 원리금 합계 130만원을 지급받았다. 28만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이자 102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연 이자율로 치면 무려 3878%라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했다.

C씨는 또한 D씨에게 2019년 5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43만 7000원을 빌려주고 188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무려 2650만원을 받아채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10만9292%였다고 김 판사는 지적했다. 또한 C씨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2020년 2월 4일 채무자에게 전화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채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

아동 실종사건 일어나면 동행한 성인 얼굴 공개

신영대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원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원도 일가족 실종사건'처럼,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원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

동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으나,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수사·사건 해결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동 실종 사건에서 성인은 범죄 연관이 드러나지 않는 한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빠르게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연극계 '미투' 전수조사 6건 성비위 접수

광주 연극계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사태(광주일보 6월 30일 7면) 후속조치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6건의 성 비위 사례가 드러났다.

광주연극협회(이하 협회)는 17일 "광주연극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희롱 5건, 성추행 1건 등 총 6건의 성 비위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말고 피해사례

만을 협회 회원들에게 공유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접수된 피해사례의 진위 여부만을 파악한 뒤 가해자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광주 연극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수사 과정 중에 일어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